

“성차별 해소 위해 민간에도 근로감독관 배치 확대”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 보고
초·중·고 사건처리 매뉴얼도 보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은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선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선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선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선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선 국방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여기부는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

보완대책에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 사안발

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태풍 ‘쁘라삐룬’ 피해와 관련해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갖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해선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저임금 7% 상승땐 中소조합서 사업자에 노무비요청 가능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17일 시행
조정 신청땐 10일 이내 협의해야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이 담겼다.

중기조합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엔 그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도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이어도 중기

조합이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조합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10일 내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30일 이내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방통위-인터넷진흥원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개인정보 취급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및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상통화를 노린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다.

접속자 수가 많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여행·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커피·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그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남북공동 추진안 구상해야”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국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단한 상상력의 바탕이 됐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 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며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체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고 여기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임시정부수립으로 이어졌다”며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3·1운동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기념사업 하나하나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00명 이내 민간과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1차 위촉된 민간위원 68명에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유철 광복회 회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차범근 차범근축구교실 이사장 등 각계각층 인사가 고루 포함됐다. 특히 68명 중 여

성위원이 35명(51.4%)으로 정부 위원회 중 처음으로 위원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소통, 기억기념, 발전성장, 미래희망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정일 춘천교대 교수와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명됐다.

위원회는 기념사업의 목적에 대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인권·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